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음 10월 27일) 제21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유치원 3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당론 채택
박용진 3법과 ‘국가보조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 등은 일반회계’ 한국당 법안 병합 심사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비를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당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보조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 등 학부모

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원화한 점이다. 대신 일반회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지문을 의무화하는 등 감시 조항을 포함시켰다.

박용진 3법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전부 재산을 출연한 상태라 사유재산과 무관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 제공된 상태라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당 법안은 현재 사유재산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보조금

은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 쓰는 재원이므로, 누리과정 지원금은 일종의 복지다. 교육부가 제도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계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면 애초 누리과정 설계 취지에 위배된다.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사립 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든 자금을 교육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계의 자율성’을 발미로 보조금과 부담금을 구분하게 되면 실사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가 낸 교재비로 명품 백을 사더라도 규제가 어렵다. 아이를 맡긴 데다 회계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유치원 회계를 문제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다. 교비회계

를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고 법인회계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한 현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 사용할 경우 정부가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 분리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학부모 부담금은 아무런 처벌규정도, 명확한 감시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 학부모에게 감시 권한과 의무를 떠넘기고 이 부분을 (그냥) 널널하게 두느냐.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그건 교비다.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 사고 내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용섭 신임 감사담당관 임명

도교육청, 서류전형·면접 통해 선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송용섭 신임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을 12월 1일자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사담담당관을 거쳐 방위사업청 사업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을 역임했다.

도교육청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및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감사담당관 공개모집을 실시했고, 별도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은 3급 상당으로 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업무, 반부패 청렴 업무 등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내년 예산 정부안 자동 상정

국회, 예산 처리 법정시한 넘기고 본회의 추후 여야 심사·협의 거친 수정안 처리

국회가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제안 설 명만 들은 뒤 산회했다. 본래 내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전날(2일)이었다. 국회 차원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제출안이 자동 상정됐을 뿐, 추후 여야 심사 및 협의를 거친 수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게 된 데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가 작용했다. 임법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한 죄송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출석의원도 총 105명 뿐이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100명, 정의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이달 2일이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심사 등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부의됐어야 한다. 하지만 문 의장과 여야 간 합의로 자동부의의 시점을 이날 오후 5시까지 늦춘 것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교섭단체 3당 간

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시 간대까지 심사 절차를 밟았으나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세수 부족분 4조원 등 쟁점 관련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후 이에 관한 협의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채위의장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제출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 ▲지출의 내용 ▲재정건전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전하며 “일자리창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학교 브랜드 가치 창출 우수 성과자 포상 전북대학교가 2018 전북대 갈채상 수상자를 선정해 3일 진수당 기인홀에서 시상식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소비생활센터 설치 결실... 도, 소비자 권익 증진 ‘우수’ 선정

전북도가 7년 연속 소비자 권익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제 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전북도는 이 같은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2년 이상을 첫 수상한 후 7년 연속 선정된 것. 이날 기념식은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도는 매년 사회적 배려 계층별로 소비경제교육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수상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소비자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고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배려 계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원봉사실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 전문 상담에 나선 것이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권익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본사 인사

- ▲고민형 임: 부국장 명: 편집국 정치부
- ▲강석훈 임: 기자 명: 편집국 사회부 사건사고팀 (12월 4일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